광주시와 전남도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특혜로 점철된 지역균형발전 포기정책'이라며 세종시가 건설되면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속의 도시로 도약하려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히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조성하고 삼성, 롯데 등의 대기업을 유치해 첨단·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상당부분 광주·전남의 역점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수정안이 11일 발표된 가운데 올 하반기 중 아파트 첫 분양이 이뤄지는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에 조성될 세종시 '첫마을' 사업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도 불구, 주거단지에는 애초 계획대로 주택이 건립된다. /대전일보=장길문 기자

MB 세종시 5원칙 깨졌다

나주 입주 협의 GS 연료전지社 발길 돌려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기업인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전남행(行)을 포기하고 최근 세종시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투자를 포기한 첫 사례로, 타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5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주혁신도시와 5분거리인 나주일반산단내 5만여평의 부지에 1천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공장 신설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신규 투자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가시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최근에는 세종시로 갈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회사 관계자가 '그룹 차원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방향을 바꿔 어쩔 수없이 전남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해 왔다"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땅값에다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인접한 세종시의 유혹을 물리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풍력부품 업체인 DMS 등 6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이들 기업까지 떠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캄캄한 터널속으로

균형발전 포기…기업 이탈로 지역기업 고사 우려

◇**지역균형발전 물 건너 가나**=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구체화할 경우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시가 애초 취지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도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땅값 및 세제특혜를 통해 첨단 기술과 정보,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세종시에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는 광주·전남지역은 '낙후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또다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삼성과 한화, 웅진 등 주요 대기업의 주력분야가 광주·전남이 그동안 준비해온 첨단·녹색분야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며 "결국엔 광주·전남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더 나은 사업여건을 좇아 광주·전남을 떠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땅값, 나주혁신도시 절반…소득세 3년간 완전 면제

◇**땅값·세제 특혜 너무하다**=광주시와 전남도의 투자유치 관계자들은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땅값'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지을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해야 광주·전남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부지가격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가격의 절반 수준인 3.3㎡당 70~80만원(기반조성비 포함)으로 결정했다. 대학과 대기업에는 3.3㎡당 36~40만 원의 저렴한 값에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땅값과 세제감면이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기업들이 광주·전남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꺾어버린 셈이다.

태양광·LED 등 성장동력 중복…지역산업 타격

◇**세종시는 기업유치 블랙홀**=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탄소저감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센터가 이전 또는 유치된다. 또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제과학대학원을 비롯한 대학 및 대기업이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업계의 최고·최신 기술 및 정보들이 세종시에 집중,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세종시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조성한다는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전남도의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LED광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역 관련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 필요**=광주시는 광주R&D(연구개발)특구 조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LED산업 육성 등 지역 역점사업이 세종시 발전방안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전략산업에는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광주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어 지역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광주R&D특구에도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같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진곡산단 및 첨단2차산업단지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4~5곳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LED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R&D특구·혁신도시 세종시와 동등한 지원을

전남도는 혁신도시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당 149만원인 혁신도시의 땅값을 10만원 인하하는데 1천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세종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조원에 가까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후 임대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종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안기업도시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J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대상 간척지 양수·도시 매립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현행 외국투자기업에 한정돼 있는 지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행기·장필수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전문가들이 본 '세종시 수정안'

"연구시설 집중…지역 우수인재 유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동력 상실"

◇**박종오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330만㎡ 규모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면 인근에 위치한 대덕특구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가 완전히 쏠릴 수 밖에 없다. 첨단 분야의 연구시설이 집중되면, 당연히 고급 인력도 집중된다. 이는 곧바로 우수한 공학 계열 학생의 쏠림 현상을 가져와 지역의 과학·공학 인프라가 허약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의 세종시 과학벨트 지구 방안은 이 같은 지역의 과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세심하게 진행돼야 한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기획실장**=애초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그리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기로 한 것인데, 중앙부처 이전이 취소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는 기업이나 대학, 상업시설이 와야하는데, 세종시로 그런 시설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첨단산업단지, 특히 LED 집적단지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부여하는 특혜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도 똑같이 줘야 한다.

◇**김용훈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 교수**=국가적으로 교육·과학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종시와 대덕 인근에 과학벨트라는 이름으로 집적화할 경우 지역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과학벨트에 연구시설이 집중될 경우 연구인력이 몰리는 것은 기본이고, 기존 광주·전남지역의 우수 인력까지도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화된 과학 및 연구기반을 고려해 세종시 과학벨트를 조성했으면 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도 이제 지역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연구시설 및 고급인력을 유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기획경영실장**=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면 수도권 과밀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인구 50만명의 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수도권이 포화상태에 달할 수 밖에 없다.

또 세종시를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충청 이남으로 내려오겠는가. 균형발전을 배려했다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문제점도 이번 발표에서 언급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았어야 한다.